

정보화사회와 경제 운용의 방향

홍 병 유

통신정책연구소 소장

일찌기 인류사에 찾아 볼 수 없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정보의 올바른 관리가 앞으로의 인류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의 핵심적 변수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제 3의 물결(Elvin Toffler)'이나 'Megatrend(John Nesbitt)' 또는 'Telematque(James Martin)' 등의 용어의 출현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정보화사회)로의 도약을 연구하고자 하는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은 기존의 제 1의 과학인 자연과학과, 제 2의 과학인 사회과학에 뒤따라 제 3의 과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 3의 과학은 실제적으로는 인간이 생산해 놓은 객관적 지식—어떠한 형태든—을 수집하고 이용하는 일을 대상으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제 2의 과학의 대상인 인간의 주관적 세계와의 상호 반응을 규명함으로써 단순한 Document가 아닌 Knowledge의 효과적인 사용증진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정보과학은 그것 자체만이 독립적인 학문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과학분야에서 일어나는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이용가능하게 하는 데에 특색이 있으며, 또한 여기에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정보과학은 새로운 과학분야임은 분명하나 다른 여러 과학분야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보화사회는 사회 대다수의 구성원이 어떤 특정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

어서 지식집약적이고, 지식생산적이며, 지식에 기반을 두는 생산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이다. 이는 또한, 어떤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제 분야의 의사선택과정에 있어서 일관성있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통신망을 가지는 사회를 말하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보수(保守)와 쇄신(刷新)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를 정보화사회라 지칭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로의 과정은 기존의 제 분야에서 일어나는 이노베이션의 급격한 과급과정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아울러 정보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이노베이션으로 인하여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보수(保守)와 신진(新陳)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추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보화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경제운용철학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지난 날, 산업화의 물결에 적절히 편승하지 못했던 까닭으로 후진국으로 전락했으며, 또한 망국한마저 새겨야 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아픔을 온 국민의 총합된 힘으로 던고 일어선지 이제 겨우 40년 남짓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또다시 세계는 '정보화'라는 과제를 안고 그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과거의 쓰린 경험을 교훈

삼아 세계적인 추세에 적극 발맞추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사회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각 부처의 정보통신산업과 관련한 행정기능의 종합적 조정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과정에는 정부의 행정시책으로서, 또는 행정상의 구체적 태도로서 고려되어야 할 사회적인 문제발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제반 문제들은 정부의 각 담당부처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나 그것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행정기능 조정은 과거 수년간의 경험적인 요인을 기초하여 판단해 볼 때,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정부는 80년 이후 정부주도형 경제운용으로 부터 민간주도형 운용철학을 기조로 하여 급선회를 시도해 온 이래, 그 모토와 행정조직의 기능조정사이에 상당한 괴리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면, 민간주도 경제 운용철학하에서 정부는 개개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없애고, 소위 인력, 기술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한 것이 아닌 산업 전반적인 간접 지원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으나 실제 정부내 개개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오히려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간주도 경제운용과 더불어 개방화의 물결에 따라 수입자유화 등을 추구하고 있으나 실제 정부내 무역 관련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들도 역시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볼 때, 현재 정부의 각종정보통신 관련법규는 행정기능의 조정이 선행되지 않고 제각기 안출(案出)되어 왔기 때문에 정보통신산업 관련법들의 향방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운용의 모토와 운용조직 조정사이에 괴리가 어떠한 이유로 발생했는가는 본고의 관심밖의 일이다. 본고는 다만, 이와 같은 과거 수년간의 경험적 요소를 근거로 할 때, 정부부처의 정보통신산업과 관련한 행정기능의 종합적 조정은 다소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 뿐이다.

본인은 간혹 고 김 재익 대통령 경제수석의

말씀이 생각나곤 한다. 1980년도 당시 그분은 수시로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모양으로 어렵게 됐습니까? 정부가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안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천만요, 정부가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어려워졌죠.'라고 했다. 그당시 본인으로서는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케변갈기도 한 말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분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과거, 일제의 규제위주의 규제법인 각종 경제 관련 법규가 해방이후 지금까지도 명문화, 또는 관행화되어 행정가들의 필력(筆力)의 일원(一源)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보겠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역시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규제가 심해지거나 또는 그 반대로 특정 산업의 혜택이 강해질 수 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이와같이 규제와 직접 지원이 강화될수록 민간의 창의는 점점 위축될 것이며, 오히려 정부의 지원만을 어떻게 하면 많이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창의가 기울어질 염려도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논리는 어디까지나 지난 70년도 후반기에 정부가 지나치게 정부주도적으로 나가다 보니 모든 산업이 거의 다 전략산업이 되었던 당시 상황하에서는 맞아 들어가는 논리라고 보겠다.

위와같은 논리적 배경을 가지고 출발한 민간주도형 경제운용의 침뚫을 지나치게 흑백논리로 받아들이면, 과거 70년대 후반기와 같이 모든 산업이 거의 다 전략산업이 되는 것과 같은 무리와 불합리에 빠질 우려가 있다. 즉, 민간주도형 경제운용을 한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곤란하다. 과거의 전략산업이 실패한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분석해야 할 것이며, 이를 잘못하여 전략산업 망국론으로 연결시키며 매도하는 분위기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60, 70년대의 전략산업의 산업정책은 70년대 후반부터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는 전략산업 업종을 정부가 독단으로 잘못 선정하거나 또는 전략산업이 확산되다 보니 모든 산업이 거의 전략산업화되어, 결국은 아무 산업도 전략산업이 아닌 결과를 초래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전략산업의 지원을 시한부로 하지 않고 무한정 실시하려 했

던 것 등이 복합적으로 실패에 작용했다고 보아야 하겠다.

우리는 과거 지나친 정부주도형 경제운용에 실패의 쓴 맛을 마신 경험이 있다. 이제 다시 지나친 민간주도형 경제-운용의 실패의 쓴 맛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시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독단을 내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략산업에 입각한 산업정책은 민간주도형 경제운용에서 이단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민간주도형 경제를 보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시켜야 할 것이다.

과거 6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써 국가의 고도 성장의 사회기반을 다졌듯이 80년대에는 정보의 고속도로망이 건설되어야만 2000년대의 발전기반이 다져질 것이며, 이러한 일을 민간에게만 맡길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민간주도의 정보화사회의 도래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정보산업의 기반을 이루기 위하여 초기 단계에 정부의 지혜로운 조정과 현명한 경제운용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본인은 다시 1980년도 당시 고 김 재익씨의 즐겨 말씀하시던 문구를 인용하면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졌나요? 천만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부가 우리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았어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런 말씀 역시 그 당시로서는 얼른 듣기에

변별할기도 하여 이해를 못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분의 말씀이 맞는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들 자신의 이해관계때문에 올바른 대안을 알면서도 정착화해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이익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어 국가의 장래를 그르쳐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 세계의 흐름이 정보화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지난 날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뚜렷한 정책방향을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

과연, 현시점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명한 독자에게 해답을 맡긴다.

참고문헌

- (1) Bertram C. Brookes, "The Foundation of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2(1980), 125-133,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2) Manfred Kochen, "A New Concept of Information Society",
The Infrastructure of an Informatin Society,
B. El-Hadidy and F. E. Horne(eds.),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 V. (North-Holland), 1984.

용 어 해 설

Co-ecutive Antenna (접속 안테나) : 신호를 수신하여 건물 내의 많은 이용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안테나 기호 ⇒ 공동 안테나

Community Antenna (공청 안테나) : 신호를 수신하여 일부 지역 내에 있는 많은 이용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안테나(회로). 접속 안테나와 다른 점은 유효 시청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청 안테나는 보다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